

## ‘물순환 선도도시 광주!’ 를 바라며

### 기고



**박재우**  
광주시 생태수질과장

2018년 여름과 올 겨울은 극단적인 기상이변의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지난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79년 만에 가장 무더웠고, 올 겨울은 1월 마지막 날을 빼면 강설(降雪)이 없는 겨울로 기록될 뻔했다. 장기간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 이상기후 현상이 이전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우리에게 일상화되었고, 이제는 봄 기상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우리나라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장마와 태풍으로 연간 강수의 약 68%가 내리고 이때 확보된 수자원을 통해 이듬해 농업용수나 상수원으로 이용한다. 최근 광주의 30년 연평균 강수량이 1,395mm인데, 2017년은 936mm, 2018년에는 1,427mm로 극단적 강우 분포현상을 보이는 것도 예사아니 할 일 아닌 듯 싶다.

보통 물의 순환에서 구름이 빗물이 되어 떨어져 강으로 유출되는 양은 전체의 약 58%이며, 나머지

42%는 땅과 수목(樹木)이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흘러보내거나 증발산(蒸發散) 시킨다. 농촌지역은 비가 내리면 상당량을 땅속에 머금어 천천히 유출한다. 하지만 도시지역은 갈 곳 없는 빗물이 아스팔트와 같은 불투수층에 의해 빠르게 강으로 흘러나간다. 이때 바닥에 쌓인 먼지와 오염물질을 함께 쓸고 내려가니 수질이 좋을 리 없고 흙탕물로 넘치는 강물 색깔이 보기 좋을 리 없다. 비가 지나간 후에는 더 이상 흘러갈 물도 부족하니 건강한 물의 순환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하겠다.

최근 20년 사이 광주는 많은 택지개발이 진행되었으며, 광주의 불투수(不透水) 면적도 1980년말 7.1%에서 2014년 24.5%로 급격히 증가하여 빗물은 그만큼 빠르게 강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광주의 지하수위가 최근 10년간 약 1m 정도 하락하였는데 강물에 공급되어야 할 지하수가 부족해져 광주천 같은 도심하천이 별도로 유지용수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건천(乾川)화 즉 마른 하천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시범 지역에 선정된 이후 광주시 전체의 물순환(water cycle)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로드맵에 따라 상무지구의 물순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전의 자연적인 물순환이 이뤄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해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기 쉬운 구조로 도

시환경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저영향개발(LID) 기법에는 노면에 떨어진 빗물을 바로 토양으로 침투시킬 수 있는 투수성포장, 건물 옥상, 도로면 등의 빗물을 빗물받이나 우수관을 통해 침투시키는 침투통, 침투관과 침투측구 그리고 가로수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수목여과박스와 식물재배화분 등이 대표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빗물을 일시 저장하였다가 이용할 수 있는 빗물저금통, 빗물저류조와 저류하였다가 서서히 침투시키는 빗물정원, 식생수로 등도 있다. 도시 열섬을 완화하며 회색빛 도시를 초록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옥상녹화도 저영향개발 기법의 하나이다.

상무지구에 적용할 저영향개발 기법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보도와 가로수에 빗물을 잘 머금을 수 있는 투수성포장,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박스를 설치하고, 공공시설과 교육시설 등에는 침투통, 침투관 같은 침투형시설과 빗물저금통과 같은 빗물이용시설을 계획하여 교육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앞으로 계획한 물순환 체계가 성공적으로 복원된다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바닥 먼지가 강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아 더욱 깨끗하고,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유희가 흘러가는 광주천, 영산강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물순환선도도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게 되면, 다시금 예전의 건강한 물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시설

### 5·18 망언 강력하게 징계하고 처벌법안 마련해야

80년 5월의 진실을 왜곡·날조·비방한 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가장 강력하게 징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은 물론 두번 다시 이같은 망언을 일삼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처벌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들끓고 있는 지역의 여론 속에는 호남이 총궐기해야 하는 것이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망언을 일삼은 이들과 한국당을 강력 성토회는 성명서를 내는 한편 고소·고발 등 즉각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5·18 단체 전국협의회 등 5·18 당시 시민군과 유공자 60여 명은 ‘지만원 구속’과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관련 단체는 “역사 왜곡을 뿌리 뽑을 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광주·전남 지자체장들도 일제히 규탄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시장과 김지사 등은 김진태 의원과 지만원 등을 향해 사죄를 촉구하고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차원의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를 기본으로 해 의회적 제명 추진 등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당이 망언 의원들을 출당 조치하라고 촉구하는 것과 함께 공조 체제를 갖춰 이같은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지역 사회 등 국민 대다수와 정치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한국당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사적 사실에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이 미 밝혀진 역사에 대해 우리가 겨우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복하는 등 위기를 모면하려는 듯 태도여서 더욱 비난을 사고 있다.

김진태 의원 등과 지만원 씨의 망언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임이 명백하다. 5·18의 가치를 훼손하고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5월 항쟁을 매도하고, 광주·전남 시민들을 모욕한 정치적 패륜이기도 하다. 나아가 5·18 영령들과 아직도 알리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시대착오적 망언에 다름없다. 이 망의 양심있는 시민 사회와 정치권 모두가 그들의 가장스러운 죄책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불어야 한다.

### 후보 등록 전부터 혼탁 양상 보이는 조합장선거

다음달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 왔다. 출마 예정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 오르는 상황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202명의 조합장을 뽑는데 후보 등록을 앞두고 4대1기량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혼탁’과 ‘과열’이라는 달갑지 않은 현상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까지 감시 활동을 펼쳐 각각 4건, 22건의 부정선거 사례를 적발해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서는 등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매표 조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기존 1억 원이던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3억 원까지 높여 부정 선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입지자들의 돈 선거에 대한 유혹은 오히려 짙어지고 있다.

잘 아다시피 조합장 선거는 좁은 지역에서 5백~2천여명의 조합원을 유권자로 한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의 성향을 파악해 ‘내표’와 ‘남의 표’를 구분하고 이른바 ‘뽕표’라는 부동층을 공략하기 위해 돈을 뿌리는 악습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입지자와 유권자가 수십년간 서로 아는 처지에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연고 주의 또한 돈 선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선거 운동 자체가 갑갑이 선거라는 데 있다. 알릴 방법도 없다. 기껏해야 문자 인사가 전부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를 알릴 토론회나 연설회도 없으니 알아서 홍보하고 투표하라는 식이다. 자연 후보자가 기뻐 웃는 연고 밖에 없다. 막판 투표판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선거 구조가 정작된 셈이다.

연봉만 1억 원이 넘고 적은 판공비와 인사권은 물론 조합 사업을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권한을 포기하기 힘든 게 조합장 선거의 속성이다. 이같은 투기판식 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온갖 현연·지연·학연으로 연결된 조직이 한바탕 투쟁 열풍을 몰고 올 기세다.

결국 유권자인 조합원이 나서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런 분위기를 가라 앉힐 방법이 마땅치 않다. 공명 선거 정착 의지에 기반한 제보로 잘못된 선거판을 바꿔야 한다. 선관위가 거액의 부정 선거 신고 포상금과 ‘선거지킴이 활동’ 등으로 선거 분위기를 다 잡겠지만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월수록 유권자인 조합원 스스로의 자각이 요구된다. ‘부정 선거 행위자를 뿌리 뽑는 것은 모든 조합원의 의무다’는 각오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장 선거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폐쇄로 남을 수밖에 없다. 남은 한 달이 고비다.

### 해빙기 도로 시설물 안전 사고 주의·예방의 길

### 기고



**양영식**  
광주시 도로과장

혹한의 겨울을 지내고 안전 취약시기인 해빙기를 맞는다. 해빙기는 말 그대로 언 땅이 녹는 시기가. 혹한을 견디어낸 땅들이 녹으면서 도로 시설 등 안전 사고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나 봄이면 사람들이 들뜨고 정신 상태도 해이해져 각종 안전 사고에 노출되기도 쉽다.

해빙기 현상 위험 요소로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도로의 포트홀(Pothole)이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표면이 열었다 녹기를 반복 하면서 도로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국부적 구멍 현상이다.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즘에는 눈을 녹이기 위한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도 주요인자로 꼽힌다.

아스팔트 안으로 물이 스며들며 얼기와 녹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큰 구멍이 뚫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해빙기 포트홀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매년 지자체마다 파손된 도로 긴급보수기간을 정하고 긴급보수를 편성 매일 도로를 순찰하면서 확인한 포트홀과 신고가 들어온 지역에 대해 집중활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이상 포트홀 현상은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발견 시 전화(120) SNS(밴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생활불편신고 웹)를 통해 빠른 신고로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빙기는 축대나 가파른 경사지 도로, 산불 진화용 임도도 부실해지기 쉽다. 보통 겨울철에는 배부름 현상으로 토양이 평균 9.8% 가깝게 부풀어 오른다고 한다. 그 만큼 재해에 노출되기도 쉬워지는 셈이다. 이런 배부름 현상이 잦은 임도나 농로를 견널 때 특히 주의를 요한다.

위급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 급하게 통행하다가 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조심 운전은 해빙기에 필수적 요소다.

농로나 임도는 언 땅이 녹으면서 도로 한편이 붕괴되는 사고도 빈발한다.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낙석이 도로에 그대로 흘러내린 곳도 많다. 새로 개설된 도로는 지자체에서도 매년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언제든 인간의 방심을 노리는 때가 바로 해빙기다. 도로 위 낙석이나 도로를 개설한 곳은 수시로 살

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해빙기는 지자체마다 수시로 위험도로를 보수하고 현장 점검을 나선다.

기온이 상승하면 그만큼 위험지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하지만 지자체가 수시로 점검을 나간다고 해도 모든 위험을 감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인들의 위험에 대한 대비 의식도 높였으면 한다.

이제 곧 화창한 봄을 즐기려는 상춘의 시기가 온다. 그런 만큼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도로 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시설의 기본이다. 사고와 방심은 늘 연결되기 마련이다. 개인도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과속이나 신호위반, 음주 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각 지자체마다 생활 속 안전 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하는 안전 문화 실천 운동은 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구성해 서로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사정에 밝은 현지 주민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하는 합동 점검체제도 좋은 대안이다.

이제 안전이 경쟁력인 시대다.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도시여야 관광객도 몰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사정 일수록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중요하다. 기해낸 봄은 해빙기를 맞아 모두가 안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더욱 안전하게 보듬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역 일꾼 뽑는 조합장선거 공정하게 치러져야

지역 일꾼을 뽑는 제2회 3·13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벌써부터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매우 뜨겁기만 하다.

때문에 선거가 바로 코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각종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우려되고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에도 자칫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선뜻 앞선다.

또한,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각종 허위사실의 작성·유포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흑색선전 등 유권자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케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극성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지난 대선때와 같이 선거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부각되어 상대 후보 비방 또는 흑색선전 등 풀뿌

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언론의 역할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해야 할 점은 가짜뉴스를 통해 특정인과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허위 기사를 작성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되고 또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때는 공직선거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돼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날 22일부터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본격적인 가동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경찰에서는 민중 고유의 명절 설을 전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과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크게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품선거운동과 흑색선전 그리고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선거인·후보자 등을 매수하는 금품선거운동, 후보자 비방을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흑색선전,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각종 불법 선거개입행위, 선거폭력 등이다.

오는 3월13일에 치러지게 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전국 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모두 1,343명(잠정)을 선출하게 되는데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다는 인식을 갖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유권자 모두가 뜻을 한데 모으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사전 검증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주권을 소중하게 잘 행사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탕규광주광역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한미방위비분담금

올해로 열번째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잠정 타결됐다. 총액은 1조389억원.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지휘협정(SOFA·1967년 발효) 제5조에 비롯됐다. SOFA 제5조에서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상당기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미국의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자 한 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일부 부담하도록 요청했다. 당시 비슷한 상황인 일본과 독일도 미국측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고, 한국 보다 앞서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도 일본, 독일이 이어 1991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했다. ‘특별’(special)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도 SOFA 제5조에는 없는 예외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첫 해 1천73억원에서 출발해 30여년이 흐르면서 이제는 1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술한 논란을 이어왔다. 때문에 타결한 적이 드물 정도로 협상과 정도 순탄치 않았다. 특히 지급액부터 분담률, 산정방식, 지급항목, 미사용액 여부까지 비슷한 상황의 가까운 일본과 비교되며 재정비를 해야한다

는 주장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비분담금의 공식적인 분담률이 총액이 일본 보다 낮지만 카투사·경찰, 부동산, 기지 주변 정비, 토지공여,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직·간접지원을 감안하면 실제 일본 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총액을 지급하는 한국과 지출항목별로 지급하는 일본과의 산정방식도 늘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다. 총액지급은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미사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수칙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적지 않은 비용부담이 언제까지 지속없이 이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은 상실감을 더하는 듯 하다. 여기에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압박하는 듯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질도 불편하기 그지 없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완화되는 반면 주한방위비분담금은 매년 늘어난 것도 씩씩한 풍경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추이만 보면 냉전시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변에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군대를 비용까지 부담해가며 주둔시켜야 하는 우리네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말바닥에 깔려 있을 것이다. 약속소극의 비애가 절절히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윤주 경주부부청대우 ly2001@srb.co.kr

<b>광주·전남 대표 정론지</b> 무등일보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	
<b>회장 조덕선</b>	<b>사정 발행·편집인 장인균</b>	<b>주필 김영태</b>	<b>편집국장 강동준</b>
<b>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계룡로 324(중흥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b>		<b>대표전화 (062) 606-7700</b>	
<b>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b>		<b>구독신청 (062)606-7776</b>	
<b>편집부 062)606-7750</b>	<b>정차부 062)606-7722</b>	<b>경제부 062)606-7713</b>	<b>사회부 062)606-7730</b>
<b>문화체육부 062)606-7737</b>	<b>사진부 062)606-7762</b>	<b>뉴미디어부 062)606-7760</b>	<b>지역사회부 062)606-7723</b>
		<b>서울지사 02)313-1681</b>	
<b>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원</b>		<b>독자재보 062-606-7730·FAX 062-606-8765</b>	
<b>E-mail mdlbo@srb.co.kr</b>			
<b>홈페이지 http://www.md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lbo7700</b>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 가장 빠른 광주뉴스

Q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